

등록번호	국립목포결핵병원	고번호
	A2-1	2

제 목:보북부의 입장에 대한 공대위의 입장

올린이:서의청 (이재현)

98/07/28 01:55

읽음: 39 관련자료 없음

보건복지부의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에 관한 의견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7월 23일 보건복지부가 국립목포결핵병원을 현 체제로 존속하도록 하는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이는 경제적 효율성을 이유로 국가 결핵정책을 수행하는 중추기관인 국립목포결핵병원을 민간위탁시키겠다는 정책에 맞서 '국가 결핵관리체제의 강화',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반대', '건강권 사수'를 주장하며 환자들이 중심이 되어 200여일 가까이 투쟁해온 결과이다.
2. 그러나 아직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기획예산위원회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획예산위원회는 국립목포결핵병원을 민간위탁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 운영비를 '용역비'라는 명목으로 책정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기획예산위원회가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을 공식적으로 철회해야만 스스로 건강할 권리,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환자의 몸으로 싸우고 있는 이 처절한 투쟁이 끝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는 또 한가지의 이유는 국립목포결핵병원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분명히 제시함으로써 두 번 다시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운운하지 않겠다는 현 정권의 의지를 밝혀야만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DJ정권 하에서 '채산성 및 운영의 효율화'라는 논리로 또 다시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방침이 거론될 것에 대해 우려한다. 이러한 우려는 현 정권이 국가 결핵관리사업의 강화방안을 제시함으로써만 불식시킬 수 있다. 더욱이 그 가운데 국립목포결핵병원의 위상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행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결핵관리 사업에 대한 의지와 결핵병원의 위상지원이 약속될 때만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소외당한 환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힘겨운 싸움은 끝날 수 있을 것이며 마음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3.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국가 결핵관리사업의 강화와 목포결핵병원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43만 결핵환자들이 마음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강화하기 위해 목포결핵병원에 대한 민간위탁 방침 철회는 물론, 마산결핵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서울, 경기, 강원, 충청지방의 결핵환자들을 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도록 중부권에 결핵병원의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둘째, 보건소와 결핵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2차 결핵환자들(초치료 이후 재발환자들)을 결핵병원으로 후송·입원시킬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2차 환자들은 입원치료가 불가피한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입원치료를 책임질 수 없는 보건소와 결핵협회가 2차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비효율일 뿐만 아니라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들을 결핵병원으로 후송시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목포결핵병원의 의료진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결핵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중 공중보건의를 제외하면 의사는 2명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7월 현재

입원환자가 270명인데 비해 간호사는 29명으로 간호사 1인당 약 9명의 환자를 담당해야만 한다. 간호사의 경우 3교대를 감안한다면 근무중에 간호사는 1인당 약 27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상황이다. 이런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결핵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목포결핵병원측은 병상 가동률을 9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기능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호남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해야 한다.

4. 목포결핵병원의 경우 '효율성'이란 곧 얼마나 많은 결핵환자들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고 있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효율성'은 '결핵병원으로서의 기능강화'가 핵심이다. 따라서 민간인에게 병원을 위탁운영시키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목포 결핵병원의 경우 핵심을 빗나가고 있다.

이에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기획예산위원회가 국립목포결핵병원에 대한 민간위탁 방침을 전면 철회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에 결핵병원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침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5. 경제위기의 국면속에서 국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방침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최근 정권은 한술 더 떠서 저소득 계층인 의료보호 환자와 행려환자의 중심적 치료기관이었던 국공립 의료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및 민영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실업자가 폭증하고 있고 중산층이 급속히 붕괴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시된 이러한 정책은 분명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철회를 위한 투쟁은 물론,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 의료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및 민영화에 맞서 공공의료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과 사회복지 예산의 증액, 사회복지의 강화를 위해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1998년 7월 27일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제 목:목포결핵병원민간위탁에 대한 보복부의 입장

올린이:서의청 (이재현) 98/07/28 01:54 읽음: 20 관련자료 없음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운영방안에 관한

우리부(보건복지부) 의견

1998. 7



목차

1. 국가 결핵관리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2. 국립결핵병원의 역할 및 기능
3. 목포결핵병원의 경영실태 및 운영개선방향
4. 결론



1. 국가결핵관리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 국가결핵관리사업의 현황

- 1962년에 세계보건기구의 기술적 지원과 권의로 국가결핵관리사업이 시작되어, 전세계적으로 국가결핵관리의 모범국가로 인정받고 있음.
- 국가결핵관리사업 목표
현재 발견된 전염성환자의 90%이상을 완치
- 치료체계
보건소 : 초치료
결핵병원 : 초치료 실패자로서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의 치료를 담당

○ 한국의 결핵실태

- '결핵근절에 가까워진 상태' 도달 추정시기 : 2080년

※ 전염성환자(객담도말양성 폐결핵) : 1명/100만 명당 미만 발생

※ 미국은 2010년, 일본은 2050년으로 추정

- 1992년 ~ 1994년 사이의 결핵발생률(incidence rate)조사결과
균양성 발생률 : 73명/10만 명당
도말양성 폐결핵환자 발생률 : 50/10만 명당(전염성)

※ 연간 22,000명의 신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 연령별 발생현황 : 20 ~ 30대에서 발생률이 높음(후진국형 발생양상)
- 전 연령에서의 결핵감염률 : 58.9%(1990년 실태조사 결과)
- 10대 사망원인에 속하는 유일한 전염병(OECD국가 중 1위)

○ 국가결핵관리사업의 문제점

- 전염병으로서 한 개인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환자가 속한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정책의 문제임
- 따라서 국가에서 환자의 발생현황 및 치료결과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치료효율을 개선하여야 함
-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료부문의 결핵환자의 실태(신환자발생현황과 그들의 치료결과)를 파악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공공의료부문의 치료효율(80%이상)에 비해 민간의료부문의 치료효율(50%이하)이 월등 낮은 실정임
- 국가 결핵관리에 중점 관심분야 : 치료약제의 개발보다도 다제내성 결핵의 발생을 줄이는데 있음

○ 국가결핵관리의 발전방안

- 전세계적으로 결핵관리에 관한 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함
- 취약한 민간의료부문의 결핵관리를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공공의료부문의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함

- 보건소, 결핵협회 부속의원 및 민간병·의원의 진료체계를 원활히 연결하여 약제내성환자 발생은 최소화 할 수 있는 치료장소로서 국립결핵병원을 활용해야 함

2. 국립결핵병원의 역할 및 기능

- 입원치료가 요하는 결핵환자에 대한 치료제공
예) 매우 쇠약한 환자, 심한 각혈 환자, 진단이 어려워 각종 검사를 단기간에 마쳐야 하는 환자, 난치성 결핵환자, 합병증이 있는 환자, 약제내성이 발현할 위험이 있는 환자 등
 - 환자 자신들도 가족과 주위 사람에게의 전염을 우려하여 장기적인 요양기능을 갖춘 결핵전문병원에 입원하기를 원함
 - 난치성 환자의 격리 및 집중치료로 난치성 결핵의 전파를 사전에 방지
 - 약제내성 환자의 전파를 차단하여 신종 난치성 결핵의 전파를 사전에 방지
- 국가구호 차원에서 생활능력을 상실한 연세환자에 대한 구호 및 요양시설로서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부랑자 및 행려자를 포함하는 저소득·빈곤층에 대한 초치료 기능부여(복지시설로서의 구호사업 기능 부여)
 - 국가결핵관리 시책의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집행 및 평가가 가능함
 - 대부분의 민간의료기관이 경제성을 이유로 장기 입원이 필요한 결핵환자 진료를 외면
- 결핵에 대한 연구 및 치료기술의 개발
 - 단순 약제개발 및 외래 치료위주에서 적극적인 입원치료 프로그램 개발로 전환

3. 목포결핵병원의 경영실태 및 운영개선방향

- 인력현황(1998년 7월 현재) : 78명
 - 의사직 2명(공중보건의 4명 제외)
 - 간호직 29명
 - 약무직 3명
 - 의료기사직 5명
 - 기타 34명
- 최근 3개년간 예산수지 현황
 - 세입 : '96년 537백만원, '96년 2,800백만원, '97년 2,973백만원
 - 세출(집행액 기준) : '95년 2,304백만원, '96년 2,800백만원, '97년 2,973백만원
- ※ 경상운영비 : 전체의 90%를 차지함
- 최근 3개년 환자진료실적현황
 - 외래환자 : '95년 2,860명, '96년 2,219명, '97년 2,855명
 - 입원연환자 : '95년 69,202명, '96년 65,859명, '97년 68,807명
- 민간위탁에 따른 투자경제성 검토
 - 의료보험적용대상자(30일간 목포결핵병원에 입원서 기준)
전체 진료비는 507,340원(보험청구액은 405,872원, 본인부담금은 9,600원)
 - 의료보험적용대상자(30일간 민간병원입원서 기준)

전체 진료비는 1,204,825원(보험청구액은 671,060원, 본인부담금은 533,765원임)

- 목포결핵병원을 민간위탁하고 입원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현 목포결핵병원 수준(월 9,600원)으로 유지시 입원환자 1인당 524,165원을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함
- '97년 의료보험 적용대상자 기준으로 국가부담금은 약 2,923백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 1997년 국립목포결핵병원과 추가운영비는 2,300백만 원이 소요되는 반면 민간위탁시 정부지원금은 2,923백만 원으로 위탁에 따른 추가비용이 623백만은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민간위탁의 타당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됨(단, 국가가소유하면서 민간에게 무상임대시)

○ 운영개선방향

- 결핵관리사업은 공익성이 강조되는 저수익성 사업이므로 민간위탁, 민영화는 현실적으로 경영수지적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음
 - 대상이 저소득층 영세민이며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전염병환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 재정에 의한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야 함
 - 국립결핵병원의 운영기본방향은 국립으로 존속하되 보건소와 결핵협회의 연계를 보다 강화하여 결핵환자를 적극적으로 입원진료토록 하여 병상가동율을 높이고 적정한 병상규모의 조정과 진료과별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및 단순 기능인력의 외주용역화 등으로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장기적으로는 전문경영인 초빙, 인사, 예산의 자율성 확보, 책임경영에 따른 성과측정, 효율적인 경영관리기법 도입이 가능한 "책임행정기관화(경영제)"제도의 도입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결론

- 사회에서 소외 받고 있는 영세계층에 대한 국가보호 강화차원에서도 국립결핵병원의 기능유지 및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국립목포결핵병원은 현체제를 존속토록 하되
- 결핵환자의 적극적 입원진료를 위해 병상가동율을 높임
- 병상규모의 조정 및 진료과별 구조조정으로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장기적으로는 전문경영인 초빙, 인사, 예산의 자율성 확보, 책임경영에 따른 성과측정, 효율적인 경영관리기법 도입이 가능한 "책임행정기관화(경영제)"제도의 도입여부를 검토함

제 목:진보민청속보

올린이:youth96 (서란주) 98/07/27 14:20 읽음:135 관련자료 없음

진보민청 투쟁 속보 14호

날짜 : 1998년 7월 27일 (월)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442-85 2층

인권 자료실		
등록일	시·도·구·군·시·군·시·군	자료번호

IMF 이후에도 민중생존권은 지켜야 한다!

정세글

국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IMF 세계자본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움켜쥐고 총체적인 수탈을 자행하고 있다. 자본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부여하고 노동자, 민중에게는 권리가 없음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전세기는 금세기 마지막의 축제라는 프랑스 월드컵의 열풍이 휩쓸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자본은 월드컵을 빌미로 새로운 상품을 내놓고 축제분위기를 만들고 있으며, IMF 구호체제라는 말을 꺼내는 것을 무색하게 만든다. 이러한 축제의 분위기에서도 민중의 생존권을 향한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즈음에 우리에게 있어 50년만의 정권교체는 무슨 의미이며, 김대중 정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할 것인가는 문제는 생존권이라는 기본권과 맞물려 작은 혼란으로 다가온다. 김대중 정부는 정권 초기 몇번을 강조해도 싫지 않는 소외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부 국민정부를 자처하고, 화려한 수식이 아닌 정부답게 개혁과 민주주의 의지를 불태웠다.

정권이 출범한지 4달이 지난 지금, 신정부가 자신들의 준비된 의지만큼 국민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 되짚어 보면, 김대중 정부가 반민중적이고 수구세력화 되어간다는 사실을 파악하는데 그리 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권초기인 3월 27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한달간 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도원동 재개발지구 강제철거 과정을 지켜보며 앞으로 전개될 국민정부의 민중탄압 정도를 가늠할 수 있었다. 도시재개발법에 명시된 가수용단지를 요구하는 철거민을 내몰기 위해 정부는 플리마켓에서 농성하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전달하려는 사람마저 불에 태우는 등의 상상을 초월한 폭력을 방조하고 묵인했다.

김대중 정부가 반민중적임을 나타내는 또 하나는, 정리해고를 반대하고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5.1절 집회의 폭력적 대응과 노동자, 학생연대의 엄단! 발표였다. 이는 이전 역대 독재정권과 다를 바 없을 뿐더러 조금이라도 믿었던 구석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400만으로 추산되는 실업자들의 참혹한 생활이 뉴스거리가 아닌 일상화된 우리의 사회를 볼 때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요구와 정리해고 반대는 생존이 달린 정당한 요구이다.

LG 경제연구소가 밝힌 우리나라의 중장기 실업전망 보고서를 보면 IMF 체제에서 저성장, 고실업의 구조가 만성화될 것을 경고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경제위기하에서 노동자의 고통분담은 필수적이고 그것이 사회적 합의라며,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민주노총의 자주적인 투쟁이 외자유치를 불안하게 만든다며 문제삼았다. 이러한 폭력적인 진압은, 외환위기의 주범인 재벌해체와 총수의 재산환수 조치, 전체예산의 25%에 달하는 국방비 축소등 정부예산의 생산적인 분배는 생각지도 않고 달라라고는 만재보지도 못한 대다수의 국민에게 국민들의 과소비때문이라며 경제위기를 대다수 국민들의 소

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이후 발생하는 자생적인 투쟁을 무력으로 막겠다는 공권력의 남용이었다.

현재의 경제위기가 기업의 무리한 외국자본유입과 부채경영, 투기성 외국자본의 유입과 이달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정부와 자본의 조기대응 실패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가 말하지 않았는가?

정부는 또한 정리해고제 도입, 공공지출의 삭감, 정부부문의 축소, 사회복지제도 축소로 현 상황을 돌파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국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정부에 엄중히 항의하고 조직된 힘으로 맞서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원칙적이기는 하지만 노동운동진영이 김대중 정부의 노동탄압에 대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투쟁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이는 노동문제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축소를 빌미로한 국민보건복지사업의 축소와도 그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진영의 당면 투쟁을 고용안정과 생활임금을 획득하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1930년 초반 미국의 노동자들이 투쟁했던 [실질임금의 삭감없는 대폭적인

신자유주의와 노동자 민중의 일대 격돌 시작!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확보, 노동공유를 기억했으면 한다. 자본의 무제한적인 해고의 자유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전체노동자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올바른 대응이라 여겨진다. 무엇이 전체 노동자를 위한 대응 방법인가 하는 것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노동자를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한 대응이 무엇인가하는 것은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앞서 김대중정부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을 말한 바 있다. 이는 현재의 국면이 어느 한가지 부문에 대한 억압이 아니라 전 민중에 대한 전면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 결핵사망률과 유병률 1위이고 인근의 일본, 중국, 태국보다도 나후된 결핵관리에 관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결핵정책의 전반적인 개혁과 법령정비를 뒤로 한 채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자본논리로 국립목포결핵병원같은 특수목적 병원을 민간에게 위탁하려는 것을 보면서 김대중 정부가 국민정부의 근거를 어디서 찾아 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IMF! 이제 시작이다. 제국주의 패권 전쟁이었던 세계 제1차대전과 제2차대전 그리고 20세기 말까지 계속되었던 이념적 대립을 제3차대전으로 본다면 신자유주의와 노동자 민중의 일대 격돌은 세계 제4차대전이다. IMF 이후에도 민중의 생존권은 지켜야 한다.

1998년 6월 16일
비대위 대표 매 상 훈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의 동향

- 98년 2월 18일 / 정부조직개혁위원회(위원장: 박경삼) 국립목포결핵병원 '99년중 민간위탁 결정 발표
- 국립목포결핵병원비상대책위원회 구성(위원장: 배상훈)
- 3월 5일 / 목포지역 주요신문으로 대두 / 내일신문, 전남매일, 무등일보, 광주일보, 의사신문, 후생신보 언론보도
- 3월 13일 / 국회의 보건정책담당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민간위탁 근거 및 결핵정책에 대한 질의서 발송
- 3월 17일 / 목포지역시민사회단체 긴급회 / 각 언론사 2차 보도자료 발송
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YMCA,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 함지비상대책위,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목포민주청년회, 목포노동자회, 전교조목포지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목포분회, 목포지구총학생회협의회 등 참가, 성명서 발표
- 목포 MBC, KBS 뉴스보도
- 3월 22일 - 24일 / 제 1차 서울심정투쟁 / 보건복지부, 국회의 중앙집담회 - 23일
서울여 집회, 세계결핵의 날행사 (프레스센터) 선전전 - 24일
- 3월 27일 - 보건복지부 민간위탁금지법 있음내용으로 질의에 회신
- 4월 3일 - 7일 / 국회의원을 위한 거리 선전전 (5일간 - 목포역, 채광는거리, 버스터미널, 여객선 터미널)
3만 1천명 서명 / 목포지역인사 100인선언
- 4월 11일 / 연세대 [미문] 공연장 - 선전전과 서명전

- 4월 12일 / MBC(목포방송) 취재현장 800 '갑옷없는 결핵환자들' 방영
- 4월 22일 / 국회청원접수 (국회의 여성재의원 소개서)
- 각 보사위원에게 서명지와 청원서류전달
- 4월 29일 - 5월 1일 / 광주서명전, 조난대 반지본문학회 '정전' 참가 / 광주전남 5.1절 정아배 참가(민주노총)
- 5월 15일 /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학생모임 (대표: 이병오) / 전남대 의대
전남대 오월제 참가 - 정치연설
- 5월 27일 - 6월 2일
6.4비밀선거 - 시의원후보 출마자를 대상으로 국립목포결핵병원민간위탁반대 의정활동서명부 조직 / 45명의 후보로부터 서명입금 / 경이답보보를 비롯한 국회의원의 도의원 2명 서명거부
- 5월 29일 / 김모임장에게 면담신청서 발송 - 6월 12일까지 통보요구
- 6월 4일 - 16일 / 의정활동 서명자 40명중 15명중 당선 / 목포시의회 특별결의안 시정준비 (서울심정투쟁준비)
- 6월 11 - 12일 / 국회보사위 청문회서명방문
- 6월 23일 / 김모임 보건복지부장관 방문 예정

자유로운 호흡을 가로막는 준비된 학살에 대한 반격!

서울 투쟁본부 : 017-276-2109, 목포 투쟁본부 : 0631-280-1266 FAX : 0631-283-2578, 학생모임 : 015-625-0205, PC통신 ID : 전대의대(나우누리)

한달 용돈의 전부인 3천원을 쥐어주며 '민간위탁을 막아달라'는 할아버지에서 맞벌이 부모와 떨어져 혼자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어린 학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들의 눈물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지난 98년 2월 18일 정부조직개편위원회에서 신정부의 조직개편으로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결정이 발표된 이후 입원 환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와 사회 각계각층의 반발이 일고 있다. 도대체 왜 환자들과 학생,사회각계에서는 이에 거세게 반발하는 것인가?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은 왜 제기되었는가?

- * IMF를 맞아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정부기구와 인력축소를 기하고자 단행
- * 국가 기능의 민영화 확대를 통한 행정효율성 향상을 추구
- * 국가 보건복지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국립결핵병원을 민간병원의 체산성 차원에서 고려하여 적지만 쌓이는 효과 없는 국가기관으로 판단
- * 우리나라 결핵실태에 대한 인식부족과 무관심으로 국가 보건정책 우선순위에 밀려남
- * 국립목포 결핵병원의 입지 조건을 노린 목포지역 인사의 위탁운영 민원이 제기됨

국립목포결핵병원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가?

- * 1962년 "목포이동결핵병원"으로 개원
- * 1983년 국가에서 국립전염병치료 시설로 흡수하여 "국립목포결핵병원"으로 확대 개편함
- * 1990년 병원 현대화 과정에 따라 대지 2만여 평에 360병상규모의 신축병원으로 준공
- * 현재 국가 3대 결핵병원 (공주, 목포, 마산)중 1997년 공주결핵병원이 정신병원으로 기능전환함과 동시에 폐쇄됨에 따라 국립목포결핵병원은 우리나라 서부권(서울, 경기, 충청, 전라, 제주) 결핵환자를 치료해 왔다.
- * 법정3종 전염병인 결핵의 완전퇴치라는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병원과는 다른 복지시설 차원에서 결핵환자의 구호, 요양을 업무로 하고 있다.
- * 환자의 대부분이 경제적 능력이 열악한 저소득 저학력의 극빈층이다.
- * 결핵환자의 진료비를 진료 내용과 관계없이 1일 320원, 1달에 만원이라는 사실상 무료진료체계를 갖추고 있다.

맞는말

선진국에서 보건복지분야 지출이 전체예산의 10%정도에 이르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1%정도에 그치고 있다. 비단 자금의 규모뿐만 아니라 정부는 국민보건 복지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며, 이번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결정은 열악한 보건복지정책을 자본의 논리로써 더욱 퇴보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명확한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 36조 3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할 권리와 정당한 의료행위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 결정이 철회 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왜 이 사안에 반대하는가?

1. 결핵의 특성, 치료경과, 유병률 등 우리의 상황

- * 우리나라 결핵 환자는 43만여명에 달하며 (유병률 1.3%)연간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수도 4천여명으로써 OECD회원국 중 1위이며 우리나라의 10대 사망원인 중 하나이다.
- * 결핵은 장기간의 치료와 철저한 추적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치료에서 방치된 1명의 난치성 결핵 환자가 1년에 10-20명의 난치성 결핵환자를 유발할 수 있다.
- * 결핵은 일단 치료를 시작하면 증상이 없어지므로 병이 다 나은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으나 환자 스스로 최소한 7개월 이상 결핵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하며 치료경과에 따라 즉시 적절한 치료기법을 도입하여야 하는 질환이다.
- * 특히 국립목포결핵병원에 입원중인 결핵환자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이어서 민간병원에서의 진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
-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익성을 지향하는 민간의 병원 운영으로는 결핵 관리의 효율적인 수행이 불가능 할것으로 우려되며, WHO에서 조차도 결핵사업의 국가적인 관리를 권하는 있는 실정이다.

2. 그간의 국가 결핵 관리

- * 우리나라 국가적 결핵 관리체계는 크게 보건소, 결핵협회와 국립결핵병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 * 보건소는 일차적으로 결핵예방과 결핵환자발굴 및 6개월 초치료를 담당하고, 대한결핵협회에서는 결핵실태조사 및 결핵검사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립결핵병원은 초치료 실패 환자와 난치성 중환자의 구호 및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 *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자율적인 결핵약 투여가 주된 내용이다. 보건소는 대부분 철저한 추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재발과 치료약제에 대한 내성균 형성 여부가 방치되고, 재치료 환자나 난치성 중환자로 악화되어 국립결핵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 * 우리나라의 결핵관리는 전체적인 조망과 장기적이고 치밀한 계획이 없이 비효율적이고 제각각으로 이루어져 투여되는 비용에 비해 실효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며, 때문에 우리는 결핵관리 사업이 기존의 제도들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제도와 관계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시행할 법령들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 * 이러한 대안이 없이 경제성이라는 잣대로 이루어지는 국립병원의 민간위탁은 복지사업과 수익사업을 혼돈하고 있는 일이며, 사실상 영세환자의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비논리적이고 반보건의적인 정책인 것이다.



우리는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반대 투쟁을 지지합니다!!

- 목포노동청년연대
- 성플럼반 병원 노동조합
- 민주노동 전국보건의료 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 목포의료원 노동조합
-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
- 목포환경운동연합
- 목포 YMCA
-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학생모임
- 광주전남보건계약직학생협의회
- 전남대학교 저항과 연대, 조선대학교 학생연대,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및 중앙운영위원

결 의 문

1. 모든 국민이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건정책이 강화되기를 바라며, 정부는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국가의 체계적인 결핵관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를 뒷받침할 정책이 시행되기를 촉구한다.
3. 건강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영세 결핵환자들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결핵병원에서 내몰리는 것을 반대한다.
4. 국립목포결핵병원 환자비대위의 활동을 지지한다.
5.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에 반대하는 다른 단체와 함께한다.
6.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의 여론화를 위해 노력한다.
7.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학생모임]을 확대시키는데 노력한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학생모임

인원 자료실	
등록일	날짜

왜 우리는

발행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학생모임
대표 이병오
연락처 전남대 의과대학 학생회실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을 반대하는가

한달 용돈의 전부인 3000원을 쥐어주며

'민간위탁을 막아달라'는 할아버지에서

맛벌이 부모와 떨어져 혼자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어린 학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들의 눈물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지난 98년 2월 18일 정부조직개편위원회에서 신정부의 조직개편으로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결정이 발표된 이후 입원 환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와 사회 각계각층의 반발이 일고 있다. 왜 정부는 보건복지부에서조차 반대하는 민간위탁을 하려하는 것인가. 도대체 왜 환자와 사회 각계각층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왜 반대하는가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은 왜 제기되었는가

- IMF를 맞아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정부 기구와 인력축소를 기하고자 단행
- 국가 기능의 민영화 확대를 통한 행정 효율성 향상을 추구
- 우리나라 결핵실태에 대한 인식부족과 무관심으로 국가 보건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남
- 국가 보건복지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국립 결핵병원을 민간병원의 재산성 차원에서 고려하여 적지만 쌓이는 효과없는 국가기관으로 판단
- 국립목포 결핵병원의 입지 조건을 노린 목포지역 인사의 위탁운영 민원이 제기됨

국립목포결핵병원은 어떻게 운영되어왔는가

- 1962년 "목포 아동 결핵병원"으로 개원
- 1983년 국가에서 국립전염병치료 시설로 흡수하여 "국립목포 결핵 병원"으로 확대개편
- 1990년 병원 현대화 과정에 따라 대지 2만여 평에 360병상규모의 신축병원으로 준공
- 현재 국가 3대 결핵병원(공주, 목포, 마산)중 1997년 공주 결핵병원이 정신병원으로 기능 전환함과 동시에 폐쇄됨에 따라 국립목포 결핵병원은 우리나라 서부권 (서울, 경기, 충청, 전라, 제주) 결핵환자를 치료해왔다.
- 법정 3종 전염병인 결핵의 완전퇴치라는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병원과는 다른 복지시설 차원에서 결핵환자의 구호, 요양을 업무로 하고있다.
- 환자의 대부분이 경제적 능력이 열악한 저소득 저학력의 국민층이다.
- 결핵환자의 진료비를 진료 내용과 관계없이 1일 320원, 1달에 만원이라는 사실상 무료 진료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는 왜 이 사안에 반대하는가

① 결핵의 특성, 치료경과, 유행률 등 우리의 상황

- 우리나라 결핵 환자수는 43만여명에 달하며 (유행률 1.8%) 연간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수도 4천여명으로써 OECD 회원국 중 1위이며 우리나라의 10대 사망원인중 하나이다.
- 결핵은 장기간의 치료와 철저한 추적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치료에서 방치된 1명의 난치성 결핵 환자가 1년에 10~20명의 난치성 결핵환자를 유발할 수 있다.
- 결핵은 일단 치료를 시작하면 증상이 없어지므로 병이 다 나은 것으로 잘못 이해 할 수 있으나 환자 스스로 최소한 7개월 이상 결핵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하며 치료경과에 따라 즉시 적절한 치료기법을 도입하여야 하는 질환이다.

- 특히 국립목포결핵병원에 입원중인 결핵환자의 대부분이 저 소득층이어서 민간병원에서의 진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익성을 지향하는 민간의 병원 운영으로는 결핵 관리의 효율적인 수행이 불가능 할 것으로 우려되며, WHO에서조차도 결핵사업의 국가적인 관리를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② 기관의 국가 결핵 관리

- 우리나라의 국가적 결핵 관리체계는 크게 보건소, 그리고 결핵협회와 국립결핵병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 보건소는 일차적으로 결핵예방과 결핵환자발굴 및 6개월 초치료를 담당하고, 대한결핵협회에서는 결핵실태조사 및 결핵검사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립결핵병원은 초치료 실패 환자와 난치성 중환자의 구호 및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자율적인 결핵약 투여가 주된 내용이다. 보건소는 대부분 철저한 추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재발과 치료약제에 대한 내성균 형성 여부가 방치되고, 재치료 환자나 난치성 중환자로 악화되어 국립결핵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 우리나라의 결핵관리는 전체적인 조망과 장기적이고 치밀한 계획이 없이 비효율적이고 제각각으로 이루어져 투여되는 비용에 비해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때문에 우리는 결핵관리 사업이 기존의 제도들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제도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실행할 법령들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 이러한 대안이 없이 경제성이라는 잣대로 이루어지는 국립병원의 민간위탁은 복지사업과 수익사업을 혼돈하고 있는 일이며, 사실상 영세환자의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비논리적이고 반보건적인 정책인 것이다.

맺 는 말

선진국에서 보건복지분야 지출이 전체 예산의 10%정도에 이르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1%정도에 그치고 있다. 비단 자금의 규모뿐만 아니라 정부는 국민보건 복지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며, 이번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결정은 열악한 보건복지정책을 자본의 논리로써 더욱 퇴보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명확한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 36조 3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할 권리와 정당한 의료행위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 결정이 철회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결핵 환자

78-5363
의대 32

인원 자료식	
등록일	분류/번호
062	
→ 220-4040	

제 목:[목포결핵병원] 공동성명서 제안

올린이:전대의대(정중혁) 98/06/14 04:28 읽음:171 관련자료 없음

목포국립결핵병원의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전국 학생회장단

공·동·성·명·서 [가안, 제안서]

우리는 정부 당국이 정부조직개편의 일환으로 목포국립결핵병원을 민간에게 위탁할 방침이라는 사실을 접하고 실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결핵은 전염병으로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10대 사망 원인 질환에 속하는 심각한 질병이다. 또한 43만명에 이르는 결핵환자 수와 유병율이 1.3%에 이른다는 보건당국의 발표만 보더라도 결핵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것이다. 유병율이 1%가 넘는 현실은 태국, 중국 등 동남아 저개발 국가들보다도 높은 수치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등이든
C90. bar

특히 목포국립결핵병원은 마산과 더불어 전국에 두 곳밖에 없는 국립결핵병원으로 서부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입원환자의 70%가 서남부 도서지역 주민이라는 점 등 목포국립결핵병원이 갖는 막대한 역할을 고려해 볼 때 정부당국의 민간위탁 시도는 즉각 재고되어야 한다. 결핵이 재발이 잘 되는 병이고 재발이 잦은 난치 환자의 경우 반드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결핵병원의 필요성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또 입원환자의 대부분이 농어촌의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입원치료비가 엄청나게 올라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치료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는 일이다.

서부권 지역

정부가 말하는 국립병원 적자해소를 위한 효율화와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민간위탁 방침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을 개인의 돈벌이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 이상은 어떤 의미도 없다. 정부당국이 국민대중의 절대절명한 보건복지의 문제를 단순 시장경제논리로 대체한다면, 이는 현 정부의 심각한 국가 경영철학 부재를 드러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전국의 학생회장단은 이 문제가 단순히 입원환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은 요구로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성당

첫째,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은 국가보건복지정책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결핵 퇴치사업을 위해서도 결핵병원의 민간위탁 운영은 그 근거가 희박하다.

명상명

셋째, 국가의 복지정책은 경제 논리로 논의될 사항이 결코 아니다.

넷째, 치료받을 권리가 있는 경제 결핵환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핵병원에서 내몰리는 것을 반대한다.

Y.S

P.S. 공동성명서에 참가하실 학생회는 연락 바랍니다.

이보영

[방법] 1. 서신 2. 통신 ID : 전대의대(나우누리) 3. 음성 : 015-625-0205

[시기] 1. 접수 : 6월말까지 2. 발표 : 7월 초

1.50

병헌.
0631) 280-1114

제 목:[목포결핵병원] 상경투쟁 연대합시다.

올린이:서의청 (이재현) 98/06/14 20:49 읽음:174 관련자료 없음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국립목포 결핵 병원 민간위탁반대 비상대책위의 상경 투쟁에
대합시다.

1. 목포 결핵병원 비대위의 투쟁 상황 개괄

[98년 2월 18일 정부조직개편위원회는 작은 정부 지향의 구체적
계획으로 국립목포결핵병원을 99년 중에 민간위탁하겠다는 결
정을 발표하였다. 이는 매년 결핵으로 4000명의 환자가 죽고, 우리
나라 10대 사망원인 중 하나이며, 현재 우리나라에 43만명의 환
자가 있는 결핵(법정 3종 전염병)질환을 소멸시키는 것을 포기한
다는 선언이었다.] 이런 상황에 분노한 목포 결핵병원 환자들은
즉시 민간위탁반대 비대위를 구성하여 투쟁을 시작하였고, 이 문
제는 목포 지역사회의 현안으로 급부상하였다. 비대위는 목포
KBS, MBC,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KBS라디오방송 등 언론사가
이 문제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였고, 시청, 역 앞 등지에서 집
회를 가졌고, 3월 22-24일에는 1차 서울상경투쟁을 하여 국민회
의, 보건복지부 방문투쟁을 전개하고, 6.4 지방선거 출마후보 48
명에게 서명을 받는(15인 당선) 등 4개월동안 가열차게 투쟁을
전개하였다.

비대위는 4월 22일 목포 결핵병원의 민간위탁 방침을 철회해달
라는 청원을 국회에 3만 1천명 서명지와 함께 전달하였다. 전남
의대 [의료연구회], 노래패 [진달래], 전남대 간호과 1학년생들이
목포 결핵병원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학생모임을 구성하고, 비대
위의 서울상경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105만원을 모금하여 전달하
였다.

2. 서울투쟁본부 건설의 목적

[김대중 정부는 재정 사업의 외부자원 활용 지침에 따른 기획예
산위원회의 국립목포 결핵병원 내년도 운영비를 용역비로 전환한
다는 발표와 행정자치부의 민간위탁 운영 방안 제출요구, 주부부
처인 보건복지부의 민간위탁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를
거부하는 것 등 사실상 목포 결핵병원의 민간위탁 방침을 추진하
고 있다.]

[비대위는 6월 17일 명동성당 앞에 농성장을 마련하는 것을 시
작으로 서울투쟁본부를 건설하여, 김대중 정권이 43만 결핵환
자를 무책임하게 방기하는 현재의 상황을 폭로하고, 민간 위탁을
철회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3. 투쟁 일정

6월 17일(수) 목포 비대위 환자 35명이 상경

오후 1시 30분-3시 30분 국회의원회 중양당 방문투쟁

국립목포

비대위

이재현

등용

등용

222

입회
260

이재현

0631)

비대위

등용

국립목포

비대위
120 인/22

장관 23~25

99년도

운영

병헌

자본의 인종

□

0631
280-1114
노도

4시부터 한나라당 중앙당 방문투쟁
이후 명동성당 농성장 마련
서울투쟁본부 활동 시작 - 비대위 5인 활동
6월 19일 오후 2시-4시 과천 정부 종합 청사 앞 집회

** 투쟁 일정에 많은 학생, 보건의료인의 참여 바랍니다.

+ 추후 일정은 투쟁 속보를 통해 공지.

4. [서울보건의료청년회]의 입장

서울보건의료청년회(이하 서의청)는 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방침이 신보수주의의 흐름속에서 공기업을 민영화하고자 하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속에서 진행되는 사례로 이해한다. 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방침은 김대중정부가 보건의료마저 시장원리에 맡겨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서의청은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며 민간에 넘기려는 김대중정권의 정책속에서 국민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방침에서 확인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경제위기속에서 실업자가 대량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이 더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김대중 정부는 우리 국민 100명당 1명이 결핵환자인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서의청은 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방침을 철회하기 위해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비대위 동지들을 지지하며, 민간위탁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이를 위해 비대위 동지들의 상경투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

첫째, 김대중 정부는 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국립결핵병원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침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김대중 정부는 검토중인 모든 공공기관의 민영화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셋째, 김대중 정부는 보건의료를 민간에 의존하려는 정책방향을 철회하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다른 많은 보건의료인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서울/보/건/의/료/청/년/회

이24현 이5-7709-9929 74

서울투쟁본부
이24현
이5-7709-9929

98-3513

제 목:[속보]목포결핵비대위병원측탄압강화
올린이:klpss (김형욱) 98/06/15 18:53 읽음: 74 관련자료 없음

국립 목포 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투쟁 관련 속보입니다.
[국립 목포 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 환자비상대책위원회](결핵 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서울 상경투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 결핵병원 원장이 "환자들이 상경투쟁을 한다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 "상경투쟁에 참가하는 환자들은 강제퇴원 시키고 재입원도 안시켜 주겠다."며 환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지난 11일에 예정되었던 투쟁 보고대회도 강제적으로 못하게 하고 결핵 비대위의 활동도 금지시키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자들을 최선을 다해 치료하지는 못할 망정 환자의 생존을 건 투쟁에 탄압으로 맞서는 병원 원장의 행태에 분노를 느낄 뿐입니다.

뿐만아니라 강제퇴원 시키겠다는 말은 환자들에게 죽으라는 말인데 이게 의사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이 모든 사태는 보건과 의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는 못할 망정 한달 입원비를 무려 40배를 올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인 결핵환자들을 길거리로 내몰려고 하는 김대중 정부의 결핵 병원 민간위탁 방침에 일차적 원인이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라는 것이 '국민을 죽이는 정부'가 인 것 같습니다.

저희 목포노동청년연대는 결핵 비대위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결핵 비대위와 성실히 연대 투쟁을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실업 노동자, 정리해고의 위협에 놓인 노동 형제들 등 부당한 억압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목포노동청년연대 = 0(31) 98-3513

서문보편 의결

제 목:[목포결핵병원]국가가 결핵을 퇴치해야 합니다.
올린이:서의청 (이재현) 98/06/15 18:33 읽음: 48 관련자료 없음
국립 목포 결핵병원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서울보건의로청년학

1. 국립 결핵 병원으로서의 위상을 높여야 합니다.
 - 국립 결핵 병원의 역할 명확화로 결핵 전문 치료 병원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 예산 중복의 요소를 없애고 통일적인 결핵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보건소, 결핵협회, 국립 결핵 병원 등 각각 실시하고 있는 결핵퇴치사업을 보건소에서 초치료, 국립 결핵병원에서 재치료 실패자나 난치환자 치료, 결핵협회에서 기술지원과 결핵실태 조사 등과 같은 역할정립으로 상호협조하에 효과적인 결핵 치료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2. 병원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결핵퇴치 사업에 앞장 서야 합니다.

목포노동청년연대

서문보편 의결

- 무의촌 낙도 이동 순회 진료를 통하여 무료 건강 검진과 주민 건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보건소와 결핵 협회 등과 업무협조로 병상 가동률을 90%이상 높여야 합니다.
- 외래 환자에 대한 치료 실시로 결핵조기치료를 유도해야 합니다.
- 원 1만원의 입원비를 무료로 개선하여 극빈 계층 구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 난치 환자에 대한 폐절제 수술을 확대해야 합니다.

서의령

민간위탁이 학살을 위한 준비라는 이유 5가지

1. 국가 보건 복지 정책의 역행
 -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 진단, 치료 관리는 국가의 전염병 관리 시책 중 일부분으로서, 민간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경우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 ★ (98 보건복지부에서 국립결핵병원기능 강화 공표가 있었다.)
 -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어려운 환자 및 난치성 결핵 환자의 입원치료시설로서 결핵환자 대부분이 영세한 자로서 장기 입원시 경제적 여건상 일반 병·의원 입원치료가 불가능합니다.
2. 결핵사업 특성상 민간위탁 운영 곤란
 - [정부조직법] 과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내용을 볼 때, 정부 사업 중 일부인 결핵전문치료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선정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 ** 민간위탁 기준 :
 - ① 단순 사실 행위 및 행정 작용
 - ②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하는 사무
 - ③ 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 ④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 사무
3. 경제성 우선으로 인한 결핵치료 사업 수행 소홀 우려
 - 민간 위탁 경영의 주목적은 국가 경영보다 민간경영이 좀더 경제적인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 민간병원은 의료법상의 법정 의료인력 충원과 높은 인건비 지급으로 현재의 진료수익 외에 국가예산지원이

10년 전 영남행으로 2만 명만이
OED 전 핵수 영남으로
15)

1년 전 4000명

입
① 년회 70%

지속되어야 합니다.

○ 경영 수지 개선의 일환으로 일반진료과목 개설시 결핵 환자 치료는 우선 순위에서 크게 밀려 날 것입니다.

4. 서부권 환자 및 지역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택 축소
○ 현 입원환자의 70% 이상이 전남 인근 도서지역 출신이며,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낙도 이동 순회 진료반의 무료 건강 검진과 건강 교육 포기로 인해 이 지역주민의 보건 복지 혜택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5. 수탁자의 부실 운영으로 인한 국가 사업 책임 소재 혼란

○ 수탁자의 책임성, 도덕성 결여로 부실 운영, 개인영리 추구 운영 등 공익성이 현저히 낮아질 경우 정부로서는 책임추궁이 곤란하며, 또한 경영권 회수, 타인 위탁 등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결핵환자 관리 방치가 예견됩니다.

○ 결핵환자는 격리수용의 필요가 있어 독립된 결핵병동 내지는 결핵병실을 갖추어야 하는바, 민간병원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결핵환자 입원을 기피하고 있으며, 결핵환자 대부분이 극빈층으로 현실적인 부담능력이 없어 결핵치료를 포기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설령 결핵환자 본인이 부담능력이 있다하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결핵 특성상 진료비 수준은 낮을 수밖에 없어 민간이 운영할 경우, 목포 결핵 병원과 같은 시설, 장비를 유지하면서 진료한다고 가정할 경우, 적자 운영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 민간에게 결핵 진료사업을 위임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 하고 '책임성이 갖지 않아서'라는 민간병원의 운영을 사실상 자유로운 호흡을 가로막는 준비된 학살에 대한 반격

-서울투쟁본부를 건설하며-

많은 사람들이 숨을 쉬면서 어떻게 숨을 쉬어야 하는지 아무도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숨을 쉬는 것은 특이한 일이 아닌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숨을 쉬는데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호흡을 잃어버린 43만 결핵환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숨쉬는 것 자체가 고통인 환자들이 많습니다.

매년 4000명이 죽어가는 참혹한 현실을 외면하고 맞

입
[한기 영남으로 2만 명]
입원 43% 43%

입원

90% 서남북도서민

민영화

4250
의료보행비는 2천 원

결핵: 재산성 및 재산에서
결핵: 재산성 및 재산에서

적자수익은

년

이런
기
취
있어야 된다는
해준다.

재산성, 정부 2억 2천 3백 30

영양 부족
근로
환경상대기 및 이식 등
것입니다

서지 않는다면 더 많은 환자들이 자유로운 호흡 한 번 가져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국립목포결핵병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서울투쟁본부(이하 투본)를 건설하고 자유로운 호흡을 가로막는 준비된 학살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은 민간위탁반대가 구결이 아닌 국민의 당연한 권리임을 밝혀내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서울상경투쟁을 전개합니다.

「목포 투쟁 120일째가 되도록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기획예산위원회를 통해 민간 위탁을 기정 사실화하려는 의도를 밝힌 것이 상경투쟁의 원인인 만큼 이번 투쟁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정부당국에 있는 것입니다」

목포권을 중심으로 투쟁을 벌인 지 120일을 맞으며 우리는 선전활동이 목포지역 이외에는 되고 있지 않다는 지역적 한계를 인식하고 결핵병원 민간위탁문제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목포를 뛰어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는 정부의 기만적인 행위임을 알리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98년
지난 2월 18일 국립목포 결핵병원의 민간위탁 소식을 접했을 때 모두가 '설마'했습니다. 사회와 격리된 병원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라고는 민간이양에 관한 무성한 소문과 불확실해진 미래에 대한 우리 환자들의 작은 소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정부조직개편을 신문보도를 통해 알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가 놀란 것은 결핵병원을 민간 위탁하겠다는 것 뿐만 아니었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적 위반 해석은 고사하고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라는 민간위탁의 당연함을 자신있게 제기하는 김대중 정부를 보면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97년 보건복지 백서를 통해 98년 국립결핵병원의 기능강화를 공표한 것을 손바닥 뒤엎듯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국립목포 결핵병원 민간위탁 결정은 전염병으로는 유일한 10대 사망원인 순위에 들어가고, OECD 가입국 중 결핵발병률·유병율이 1위인 점을 망각한 처사이며, 결핵 관리 수준이 이웃한 중국이나 태국보다 뒤떨어져 아프리카 수준이라는 우리나라 결핵상황을 완전히 무시한 정책결정입니다.」

또한 정부도 IMF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이 추락해 어느 때보다도 결핵발병의 조건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어

최소한의 예방사업과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가 세계보건기구의 '결핵의 국가 관리 권고'와 고치아라타 단장의 '세계 결핵비상 선포'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 정부의 움직임을 긴장하여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의 외부자원 활용 지침에 따른 기획예산위원회의 국립 목포 결핵 병원의 내년도 운영비를 용역비로 전환한다는 발표와 행정 자치부의 민간위탁 운영 방안 제출 요구, 주무부처인 보건 복지부의 민간 위탁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를 거부하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일련의 이러한 행위가 43만 결핵환자에 대한 학살의 준비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립목포 결핵병원이 민간 위탁되면 진료비 인상으로 노동력과 경제력을 동시에 상실한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사실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수탁자가 수익증대를 위해 일반진료과목을 신설해 돈이 되는 일반환자들을 입원시킴으로써 결핵환자들의 입지를 좁혀 결국 밀려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민간위탁 이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데도 이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건강 향상이라는 국가의 기본책무를 포기한다는 비난과 새로운 '국민의 정부식 적산불하'라는 도덕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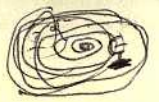
우리는 5년 후 김대중 정부가 진정 '국민의 정부'로 평가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IMF를 빙자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결핵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이 사회의 결핵에 관한 최소한의 안정망인 국립목포 결핵병원을 민간위탁 시킨다면 IMF자본 독재 정권이라는 씻을 수 없는 정치적 오점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비대위는 목포, 서울 투본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호흡을 가로막는 준비된 학살에 총반격을 시작합니다.

1998년 6월 15일

국립 목포 결핵 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배 상 훈

인권 자료실		
등록일	장소	요약



제 목:[목포결핵병원]상경투쟁속보1호

올린이:서의청 (이재현) 98/06/18 11:17 읽음:110 관련자료 없음

국립 목포 결핵 병원 민간위탁 반대 비상 대책위 서울투쟁본부 투쟁 속보 98-06-17
17부터 서울투쟁본부가 활동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투쟁속보를 띄우겠습니다. 동지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17일 투쟁 일지

- 06시 비대위 6인 목포 출발 11시 여의도 도착 - 서울 보건의료 청년회 결합
- 1시-3시 국민회의 중앙당 당사앞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유인물을 나누어주면서 확성기를 이용해 집회를 짐.
면담신청하여 보건복지 전문위원과 면담함. 결과는 "도와주기는 하겠지만,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 이기 때문에 그쪽과 연계해보는 것이 좋겠다."
- 2시 30분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집회에 결합함. - 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 투쟁을 소식지에 계속적으로 실겠다고 함.
- 4시 한나라당 중앙당 당사 앞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유인물을 나누어주면서 확성기를 이용해 집회를 가짐.
면담신청하여 민원담당 면담전담자를 만남. 결과는 "빠른 시일내에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함.
- 5시 명동 성당에서 농성장을 차리기 위해 신부님과 면담하여 허락을 받아냄.
- 7시 농성장을 완전히 만들고 난 후 서울투쟁본부와 서울보건의료청년회, 경인지역 의과대학 학생회 협의회 집행국, 경인지역 간호학과 학생회 대표자 협의회 집행국, 서울대 간호대 학생회 집행국이 간단한 간담회를 가짐.
18일에 서울대병원 시계탑에서 있는 병원노동자 총력 투쟁 결의대회에 서울투쟁본부 대표가 투쟁 발언하기로 함.
- 8시 서울보건의료청년회, 경인지역 의과대학 학생회협의회 집행국, 경인지역 간호학과 학생회 대표자 협의회 집행국, 서울대 간호대 학생회 집행국이 서울지역 대책위를 꾸리기로 결의함.
대책위 준비모임 회의 : 6월 23일(화) 늦은 7시 농성장.
대책위 발대식 : 6월 24일(수) 늦은 5시 농성장 앞.

■ 국민회의 중앙당 면담에 대한 간략한 평가.

보건복지부 :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장표명을 할 수 없다. 혼자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

국민회의 :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보복부와 접촉해라. 도와주기는 하겠다.

→ 목포 결핵 병원 민간위탁 결정은 국민회의와 보건복지부가 한 것과 다름 없다. 현재 서로에게 이 문제를 떠넘기고 있으며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보복부와 국민회의가 입장 표명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며, 어느 쪽에서든지 빨리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 서울지역 대책위 발대식까지의 일정.

- 6. 18(목) 임단투관련 병원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서울투쟁본부 대표 발언.
- 6. 23(화) 서울지역 대책위 준비모임 회의 - 7시 농성장.
- 6. 24(수) 서울지역 대책위 발대식 - 6시 농성장 앞.

제 목:[목포결핵병원]상경투쟁 속보2호

올린이:서의청 (이재현) 98/06/18 22:08 읽음: 95 관련자료 없음

자유로운 호흡을 가로막는 준비된 학살에 대한 반격! 국립 목포 결핵 병원 민간위탁 반대 비상 대책위 서울투쟁본부 98-06-18 투쟁 121일째

투쟁 속보 2호

6월 17일부터 서울투쟁본부가 활동하였습니다. 앞으로 매일 투쟁속보를 띄우겠습니다.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바랍니다.

서울투쟁본부 연락처 : 017-276-2109

목포투쟁본부 연락처 : 0631-280-1266

(FAX 0631-283-2578)

통신 ID : Hitel SWC100(서의청) / 천리안 MPLABOR1(목포투본), SWC328(서의청) / 나무누리 서의청, 전대의대

투쟁 지원금을 보내주세요.

: 국민은행 배상훈 552-21-1034-557

(지금 명동에는 경찰이 전기를 끊어, 저녁 9시 30분만 되면 주위의 가로등이 꺼져 아무일도 할 수 없습니다.)

농성장 위치 : 명동성당 입구

■ 오늘 투쟁 일지

오전 농성장 천막위에 비닐칩.

1시 목포내일신문 보도자료 발송

3시 민중의료연합 지지방문, 지원금 5만원

보건의료단체 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 위원회에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반대를 요구안으로 제출하기로 함.

4시 시사뉴스에서 최성희기자가 농성장에 와서 취재함.

7시 서울대병원 앞 광장에서 열린 ['98 임·단투 승리와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병원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배상훈 투본위원장 투쟁발언, 유인물 선전.

■ 동지에게 보내는 짧은 글

무차별적인 민중탄압이 세련된 통치기술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민중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경제정책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17일 신문보도에서 서울역 노숙자 결핵감염율이 일반인 감염율 1%보다 많은 12배로 나타나 결핵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싸움은 단지 지역 어느 한 병원의 싸움이 아닙니다. 12%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소외된 민중의 마지막 보호의무를 국가가 최소한의 양심으로 지켜주어야 한다는 정당한 싸움입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 앞으로 일정

6. 19 10시-2시 과천 종합 정부 청사 앞 집회

6. 20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 지지방문 예정 2시, 국민운동본부 집회 마무리에서 투본 위원장 발언 가능.

6. 25 아침 9시 김모임 보건복지부 장관 목포결핵병원 방문예정.

5시 포럼개최-비대위 위원장 참가. 주제 : 국립 목포 결핵병원 운영에 관하여

주최 : 서남방송과 목포포럼

6. 29 목포 비대위가 상경투쟁 계획잡고 있음.(가안)

제 목:[목포노동청년연대]결핵병원비대위의농성을지지한다

올린이:klpss (김형욱) 98/06/18 20:56 읽음: 79 관련자료 없음

98. 6. 18. 목포노동청년연대

결핵 환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정부당국을 규탄한다

-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 비대위의 농성을 지지하며 -

1. 결국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 지난 2월 18일 정부조직개편위원회(위원장:박권상)의 민간위탁 결정발표 이후 서명운동, 국회청원 등을 통해 민간위탁의 부당성을 꾸준히 알려나갔던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비대위)의 환자들이 정부당국의 민간위탁 기정사실화를 규탄하기 위해서 6월 17일부터 명동성당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병원을 벗어나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현실은 누구의 책임인가. IMF 구조금융을 핑계로 국가가 응당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정책의 후퇴를 당연시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는 비대위의 농성은 누가 보더라도 정당한 민중생존권 쟁취투쟁이다.

2. 정부의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결정은 우리나라가 결핵이 전염병으로는 유일한 10대 사망원인 순위에 들어가고 OECD 가입국 중 결핵사망율과 유병율이 1위이고 일본, 중국, 태국보다도 결핵관리가 낙후된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결핵과 같은 전염성 질병을 치료하는 병원을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경제적 이윤논리로만 접근하는 정부당국의 태도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자세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더구나 결핵이 발생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사회의 저소득층인데 민간위탁이 되면 한달 치료비가 1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어 사실상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점에서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은 결핵 환자들에게는 죽음을 강요하거나 재촉하는 학살 행위나 마찬가지이다.

3.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 방미 이후 총체적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개혁의 방향이 이전의 정리해고의 도입으로 인한 광범한 실업자 발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효율성이라는 그럴듯한 포장하에 노동자, 민중의 삶을 피폐하게 하거나 후퇴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한번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희망이 사라지고 정부당국이 부당한 민간위탁을 계속 추진한다면 이 지역의 주민과 민주단체, 그리고 전국의 동지들과 연대하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98. 6. 18. 목포노동청년연대